

기업애로 해소



- 01 지식산업센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가능
- 02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체납징수특례' 신설 제안
- 03 불합리한 임대료 산정 기준, 기업 편에 서서 잘못을 고치다
- 04 경기도 외투단지, 규제를 만들어 규제를 합리화하다!
- 05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키다



2021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지식산업센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가능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을 통한 규제합리화 사례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 031-8008-4108



개선배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건축법상 공장목적 외에 사무실을 이용한 업무시설은 입지가 불가능
 - 산업집적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상 건축법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용도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또는 업무시설이 적합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를 공장으로 할 경우 제조업체만 입지가 가능하므로 2010년 산업집적법 개정 전 아파트형공장으로 후퇴 우려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득할 경우 건축사사무소의 건축법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나 업무시설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
 - 산업집적법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한 시설에 건축기술서비스업이 있음에도 지식산업센터가 건축법상 공장이라는 이유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불가한 사항임

[피해사례]

○○○는 2020년 11월 건축사사무소를 이전 개설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 및 금융 혜택이 있는 △△△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도 약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입주하지 못하고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계속 부담하고 있고 현사무실 임대비도 나가는 등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1년 안에 입주하지 못하면 취득세 50% 감면받은 것을 추가 납부 및 재산세 감면도 사라지며, 의도치 않게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되게 되어 구입시 환불받은 부가세도 문제가 생겨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할 상황임



개선내용

- 「산업집적법」 및 「건축법」의 상이한 시설입지 규정이 법령개정을 통해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불가능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관원회신을 통해 규제 해소

개선전

→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불가

개선후

→ 건축사무소 개설 시 산업집적법 상
입주가능대상업종 및 실제 사무실로
사용가능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가능해짐

경기도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21.4.1.)



지식산업센터 복도



지식산업센터 내부 사무실

추진과정

- '21. 1. 28. 민원인 국민신문고 건의(1차)-남양주시 불가 답변 회신
- '21. 2. 2. 민원인 국민신문고 건의(2차)-남양주시 불가 답변 회신
- '21. 3. 8. 경기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합리화 문의
- '21. 4. 1.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개최
- '21. 4. 1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 '21. 4. 22. 국토교통부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실에 대한 가능여부 공문 회신



개선효과

-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기업 활성화
- 지식산업센터에 기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위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규제 완화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체납징수특례」 신설 제안

 추진부서 파주시 징수과 ☎ 031-940-4268



개선배경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는 폐업 후 재창업한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 및 본세의 분납허가의 세제 지원이 있으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체납징수특례 신설의 제안 필요성

[피해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경제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세 차원의 지원이 없어 체납자의 경제 재기에 어려움이 있음.

※ 영세개인체납자 세제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회생을 지원



개선내용

개선전

→ 지방세에는 조특법에서와 같이 영세개인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과세 형평성이 어긋남.

개선후

→ 영세개인체납자 회생 의지 고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재취업 및 재창업 후 가산금 면제 및 분할 납부 법적근거 마련

상급기관 개선과제 제안

- '20.02.07. 규제개선과제 제안 제출
- '20.02.18. 지방세입제도개선 토론회 제안
- '20.02.27.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안건 제출
- '20.04.13. 경제위기대응 현장지원을 위한 설문제안
- '20.10.23.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제출

드라이프트 혁신동아리 활동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5월 동아리 발대식, 동아리 연구모임 5회(2020년 7,9,10,11,12월)
- 7월 체납액징수특례 연구 분야별 발표
- 10월 지방세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연구과제 발표

입법진행 경과

- '20.11.13. 파주시 제안 수용, 행안부 제출(경기도 → 행안부)
- '21.01.13. 경기도지사 중대본회의 통한 중앙부처 건의
- '21.02.02. 의원입법발의
- '21.03.23. 국회 본회의 통과
- '21.04.13.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신설>

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1. 국세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 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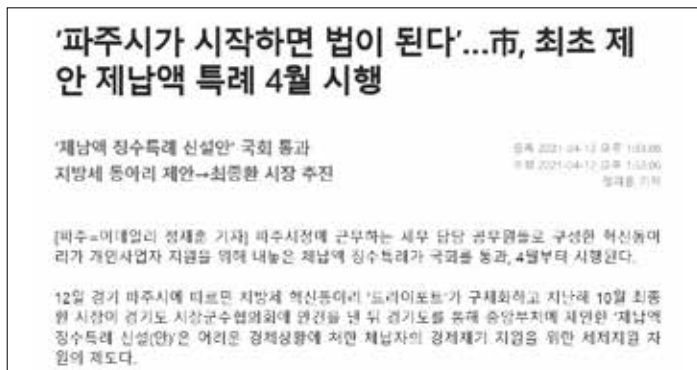
- 상급기관에 「채납액징수특례」관련법 제정을 '전국 최초' 건의하여 세제지원 활성화
 - －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 본세의 장기적 분할납부의 세제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회생지원
- 경제재기의 사회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 기여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0.12.7.주 연합뉴스 외 다수〉



〈보도자료, 2021.4.12.주 이데일리〉



칠전팔기 영세개인체납자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안 신설



 파주시 세정과 박세용 031-940-4218

파주시 지방세 연구모임인 드라이포트는 지방세체납을 다루는 징수와 직원들로 구성된 순수 자체 연구모임입니다. 지난 한 해 1년여의 시간 동안 「칠전팔기 영세개인체납자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안 신설」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결국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국에 시행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의 노력을 경진대회에 나가 발표하고 입상할 수 있게 되어서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신 경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의욕이 충만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규제합리화, 적극행정, 혁신」 단어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무한 긍정이고 창의적이며 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에 대한 자기부정이며 조직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내부적으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처음 「체납액 징수특례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을 때 무시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의 눈초리로 거의 호응 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법률이 개정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시대가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성격상 신중해야겠지만, 의견 개선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자유롭게 말하고 실험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조직이 활성화되고 직원 개인들의 삶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우리와 같이 기존 관행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을 또 다른 드라이포트팀을 응원합니다.

03

불합리한 임대료 산정 기준, 기업 편에 서서 잘못을 고치다

경기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내 입주한 협력업체 임대료 중복부과 면제

 추진부서 경기도 투자진흥과 ☎ 031-8008-2779



개선배경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사업장 내 협력업체를 동반 입주시킬 수 있으나 기존 임대료는 변경 없이 협력업체 임대료 중복부과는 불합리하며 기업 손실을 초래함
 - 협력업체가 입주한 사업장 면적은 모기업의 임대료 책정 면적에도 포함되어 있음
- ☞ 임대면적의 중복으로 불합리한 임대료 책정 기준의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전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제22조(협력업체 입주제도)
① ~ ③ (생략)
④ 임대료는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개선후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제22조(협력업체 입주제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한 협력업체의 임대료는 제
17조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주기업의 사업장 내 협력업체가
입주한 면적은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추진과정

- '21. 3월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건의
'21. 7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간담회 건의
'21.11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71호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



개선효과

- 외투단지 내 기업이 잔여 계약기간까지 임대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 최근 협력업체 입주 요청 기업이 증가하여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임대료 부담 없이 협력업체 입주하여 원활한 기업활동 기대됨

경기도 외투단지, 규제를 만들어 규제를 합리화하다!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 관리운영 매뉴얼 세부지침 수립 시행



추진부서 경기도 투자진흥과 ☎ 031-8008-2779



개선배경

- 투자자의향서, MOU체결, 부지분할·합병 등 기업유치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어 기업의 혼란이 발생하고, 입주 후 부실기업의 투자매칭·영업양수도 등 회생지원 및 사후 처리를 위한 명확한 체계가 없어 국·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 발생
- 특수성이 많은 외국인투자 임대단지(외투단지)에 정주할 수 있는지 충분한 사전 검증이 없어 입주 후 외투비율, 사업계획 등 입주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하였음

☞ 전국 최초 경기도 외투단지 관리운영 매뉴얼 세부지침 수립,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개선내용

개선전

1. 외투단지 관리운영 매뉴얼 세부지침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2. 입주자심의제도

- 정성평가 100%
-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6명, 외부인원 1명

개선후

1. 외투단지 관리운영 매뉴얼 세부지침

- 투자유치절차
 - 입주 절차·관리 강화 및 사전검토확대
 - 철저한 사전평가 후 계약절차 진행
- 외투단지관리
 - 입주자심의 의견 계약서 반영
 - 잔여부지, 필지 변경 기준 수립
 - 체납기업 자구책 검토 후 계약유지 결정
- 관리대상기업
 - 회생지원, 행정처분, 경공매 관리

2. 입주자심의제도

- 정량평가+정성평가 도입
 - 사업성, 재무, 기술경쟁력, 지역 기여도 반영
- 심의위원 변경(道·市공무원→ 외부전문가)
 - 변호사, 대학교수, 투자유치·자산관리전문가 등



개선효과


- 전국 최초로 외투단지의 실정에 맞게 기업유치, 입주 단계별 관리와 부실기업의 처리방안을 상세히 담아 효율적 국유·공유재산관리 정착에 기여하고
- 기업에서는 복잡하고 특수 조건이 많은 외투단지에 정주할 수 있는지 충분한 사전 검토로 입주준비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 감소에 효과적이며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내기업 임대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계획으로 향후 모든 임대산업단지 규정 수립의 초석 역할 기대



보도자료

경인방송 TV FM
2021년 07월 21일 (수)
종합

경기도, 외투단지 체납임대료 12억5천만 원 환수... "적극행정 성과"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투자지역 임대산업단지 내 체납기업에 대해 총 12억5천만 원의 임대료를 환수했습니다.

도는 외투단지내 체납임대료 환수를 위해 지난해부터 자본합작과 영업양수도 같은 투자 매칭으로 기업회생과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모두 4개사로부터 12억5천2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내 외투단지 내 총 체납 임대료 85억 원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도는 체납임대료 중 과선과 청산, 폐업한 기업의 체납액이 전체의 85%인 55억7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 환수율은 42.7%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방재 수출산업단지 입주기업 0사의 경우 외국인 자본철수로 인해 외투단지 입주자가 없어 상설되고 경영위기로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도는 기존 공장매입을 희망하는 유사 업종의 잠재투자자를 발굴해 기존 공장에 대한 영업양수도를 지원했고, 미납임대료 2억4천여만 원 환수에 성공했습니다.

평택 외투단지 내 또 다른 외투기업 0사에 대해선 유망한 국내 자본 매칭을 통해 체납임대료 환납을 조건으로 자본합작이 완료되도록 합의를 지원해 5억여 원을 환수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미결제무에 대해서는 가압류와 지급명령, 기업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수할 방침입니다.

이런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체납임대료를 환수에 성실 납부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탄력과 포용이 혼합된 근원적 접근방식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외투단지 재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평택, 화성, 파주지역에 8개 임대단지 191만㎡에 99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매출은 8조 6천190억 원, 외국인투자 21억4천만 달러, 고용 9천4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구대서 kds@ifm.kr



한국경제

2021년 07월 22일 (목)
28면 전국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 기업들 살린다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투자지역 일대산업단지(이하 외투단지) 내에 신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심의제도 강화 등 새로운영지침을 마련한다. 입주기업의 파산을 막고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노내 외두단
지의 체납임대료는 약 85억원으로 파산과

폐업 등으로 인한 채납이 전체의 66%인 55억7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채납임대료 가운데 14.7%에 해당하는 12억5200만 원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환수했다.

이선범 경기도 투자환경팀장은 "최근 일부 외투단지 입주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임대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두 자매집 등 기업희생을 최우선 목표로 세

무우염지침을 마련해 지원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에는 평택 주발외도단지 등 8개의외도단지가9개기업이 입주해 있다. 전국 최대 규모다. 이천주경기도 제2차통화장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체납업체를 늘려주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원칙과 포용이 혼란된 균형적 접근방식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인외도단지 세율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세종시 기업

그린뉴딜 신기술「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키다.

신호등 지침 개정으로 신기술 성능평가 규격 신설,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개정으로 난연성 기준 완화

 추진부서 안양시 정책기획과 ☎ 031-8045-2211



개선배경

-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을 세계 최초 개발하였으나,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2011)」에 신기술 성능평가 규격이 없어 7년 동안 시장 진입을 못 해 사장 위기에 처함
- 이후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강화 중첩 규제 발생으로 신기술뿐만이 아니라 전국 신호등 업체의 판로까지 차단되어 전국 교통 신호등 체계 혼란까지 예견

[피해사례]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성능평가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성능평가기준이 기존제품에 한정하여 2가지 특허를 획득한 혁신제품이지만 등록 후 7년간 제품화하지 못하였고, 이어진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강화로 인해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신호등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모든 기업의 판로가 막히고, 전국교통신호등 체계 혼란도 예견되었음

※ 관련규정 「경찰청 LED신호등 지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신기술 성능평가 규격 신설하여 시장진입 가능, 신호등 외함 난연성 기준완화로 기존 기업 판로 확보





개선내용

개선전



-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2011)」에 신기술 자동디밍절전형 교통신호등 램프의 성능평가 규격이 없어 제품으로 판매가 불가
- “신호등 외함(外函)의 재료 난연성 (難燃性) 기준 UL 94 V-0 등급 이상”규제 신설로 국내 신호등 업계 판로가 막힘

개선후

- 신기술 성능을 반영하여 조광제어 방식에 “제어기 방식”을 신설, 성능평가를 통한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
- “신호등 외함(外函)의 재료 난연성 (難燃性) 기준 UL 94 V-2 등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신호등 기업 기존의 판로 유지

- 수백 차례의 건의, 협의를 통해 2년 만에 관련 부처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에너지 절감, 친환경 신기술 신호등이 시장진입에 성공하였고, 63개 신호등 업체도 기존 판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특히 예견되었던 전국 교통 신호등 체계 혼란도 예방하였음.

신기술 신호등과 기존 신호등 비교

기존 신호등	디밍 방법		신기술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p>조도데이터와 신호주기를 제어기에 전달하여 신호등램프의 점멸과 디밍을 동시에 실시하는 시스템. 과부하, 조기 성능저하로 기존 조도 미확보로 대부분 디밍 미실시</p>			 <p>별도의 제어기 없이 개별램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점진적 자동 디밍</p>
6.5W			3.5W
눈부심 현상, 시인성 저해			시인성 좋음(기존대비 98% 이상)
제어기 등 일체 교체			램프만 교체(기존대비 90% 절감)

규제 1 :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7년간 시장 진입 불가

[대응 논리]

기술의 혁신성(세계최초 신기술), 안전성(최적의 시인성), 경제성(전력사용 46%, 설치비 90% 절감), 친환경성(탄소배출 연간2만톤, 탄소중립비용 10억원 절감)

☞ 세계를 선도하는 K-ITS 마중물 신기술 시장진입을 위한 제품성능평가 규격 추가 필요

'19. 2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규제 최초 발굴

'19. 3월~12월 73차례의 밀착 지원을 통한 2번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실패

'19. 3월~'20. 4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부처 건의 및 협의

'19. 5월~12월 기업 신제품 테스트 자료 등 정량적 객관적 평가자료 마련 노력

'20. 5월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개정 완료

규제 2 : 유예기간 없이 신설된 신호등 외함 난연성 기준으로 63개 신호등 업체 도산 위기 직면

[대응 논리]

- 신설된 난연성 기준의 불합리성: 신설 규제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V-0*)은 소비전력 6~7W로 화재염려가 없는 현행 LED 신호등**에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기준

* V-0: 소방용구나 2차 발화의 염려가 높은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최고등급의 난연성 기준

** 교통신호등 9,531개 중 98.9%인 9,426개가 LED조명 신호등이며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지난 10년간(2010 ~ 2019) LED조명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0건' (소방청 화재연감 통계)

- 유예기간 없는 시행 : 국내에 기준을 충족하는 외함생산 가능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음에도 준비기간 없이 시행된 규제로, 시장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던 신기술 포함 63개 영세신호등 업체의 판로가 순식간에 봉쇄, 전국교통신호등 체계 혼란도 예견

- 준비기간도 없는 과도한 규제의 개선에 공감하는 63개 신호등기업, 협회와 함께 개선 추진

☞ 산업환경과 기업 상황을 반영한 규제의 완화

'20. 3월 신호등 업체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 규제 발굴

'20. 3월~11월 전문가 자문, 관련부처 건의

'21. 4. 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난연성 기준 완화 V0→V2)



개선효과

- 신기술 신호등 2,000억 국내 시장 진입과 해외시장 물꼬
- 친환경 그린뉴딜 선도
 - 신기술은 소모전력 약 46% 절감, 전국 도입 시 연간 4,600만kw 파격적인 에너지 절감 기대
 - ※ 이는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 294kwh/월 적용 시, 15만 가구 이상이 한 달에 사용하는 전력량임
 - 탄소배출량 연간 2만여 톤 절감 가능
- 국가 예산 획기적 절감 및 국가·지자체 신호등 수급 원활화
 - 소모 전력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연간 약 168억 원 절감
 - 신기술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없음, 설치비 90% 절감
-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야간 신호등 눈부심 방지 및 주·야간, 일몰·일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최적의 시인성 제공으로 도로교통 안전 확보
- 난연성 기준 완화를 통해 63개 영세 신호등 업체의 봉쇄된 판로를 복구하여 기업의 도산을 막고
- 산업환경과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예견되었던 전국 교통신호등 운영체계 혼란을 예방
-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교통시설물 개발 촉진



규제샌드박스 기업 간담(전문가)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작성 지원



임시허가 신청서 작성 지원



규제샌드박스 대응방안 논의(전문가)



2020. 1. 신기술 소개 보도 자료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

대회 이래 유례 없는 '최초 금자탑'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

장순철 기자 js2@gynews.com / 등록 2021.09.16 13:48:52 / 12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2019~2020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대회 이래 유례없는 안양시가 이룬 최초의 금자탑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도전해 그 중 12개 실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10건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안양시는 우수상을 거머쥐며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도 획득했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성과는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이 기사화됐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킨 사례이다.

기업 규제 발굴부터 해결까지의 상상한 과정을 담은 안양시 어난영 규제개혁팀장의 발표는 심사위원과 청중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은 기존에 제어기를 통한 광도 제어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센서를 통한 자동 광도조절로 전력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파격적으로 줄이며, 최적의 시인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특허 제품이다.

그러나 기업은 신기술 제품의 성능평가 규격 부재 및 유예기간 없어 강화된 인증규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업 애로와 만난 안양시는 2년에 걸쳐 다채널 건의를 통해 증점 규제를 해소해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성공시켰고 유예기간 없어 강화된 규제로 판로가 봉쇄된 전국 신호등 업체들의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복구했다.

신기술은 최대 50%까지 전력사용량 절감과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시인성을 높여 교통안전성을 제고하고, 파격적인 저비용 도입과 유지비 절감이 가능한 혁신기술로 전국적용 시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5일 전수식에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는 시민편의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적극행정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탄소배출 절감을 통한 그린뉴딜의 다들움이 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안양시는 지난 3년간 신산업 규제혁신에 집중하여 원천기술 KT 융합 의료기기(2019년 최우수), IoT 기반 스마트 AED(2020년 최우수), 스마트팩토리 등 6개 신기술의 473조 원 규모 세계시장의 물꼬를 트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3년 연속 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이라는 빛기 절든 성과를 거두며,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선도지자체 임명을 재확인한 안양시의 한국판 뉴딜을 향한 멈추지 않는 규제혁신의 도전이 기대된다.

2021. 9. 행안부 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애자일(Agile) 안양

최근 많은 기업에서 새로운 경영철학으로 '액자달(Agile)' 조직문화가 떠오르고 있다. 액자달이란 '가볍고, 유연한'이라는 뜻으로 사무실과에서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팀원에게 자의 결정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문화가 기업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주고,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내고 있다. 어떤 곳은 한국형액자달에서 발표되었던 액자달 성과사례를 지렛대 삼아 돌아다

© 2006 Blackwell Publishing Ltd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빠른 행정

안양시는 90년대에 1기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여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다. 그러나 13개의 대기업과 8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도시경쟁력이 약화됐다.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재도약하기 위해 안양시는 다방면의 준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산업입지지원 정책을 시작으로 41개소의 지식산업센터를 입양(2개소: 2022년 준공 예정)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에 4,526개의 기업이 입주했다.

안양시는 기업에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양에 집중했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동 먼저 재검토할 부분 중 '복합 변화, 노년 생활' 문제였다. 산업 프로그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허물고 이혼은 '경제의 붕괴, 경제의 융복합' 변화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더는 노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문제를 먼저 극복해야 했다.

* Values are means \pm SD.[illegible]

해자일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

[illegible]

"매년실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일제라는 명확한 책임압박이 없어서 추후에 더욱 과다
 해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될 때까지 만만치 직원들을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군민들 발군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 성과를 낼 조직원들
 대한 보상 시스템과 조직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최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결론
 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시행해야 앞으로 더 가치있게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지형은 행정가구에 따라 운영은 배치된 공공부분 배치의 한 예시가 되었다. 최대도 시장은 안양시 전 조치가 원활하고 유연한 네트워킹을 갖춘 배치로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며 보부를 밝혔다.

2021. 3. 한국재정정보원 규제개혁
사례 소개 인터뷰 중

- 신호등의 시인성과 소요전력의 획기적 개선 제품 시장진입 규제개선
- 자동디밍 절절현 신호등 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 판로를 구하다

대표님...이제는 그 신호등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정책기획과 이난영 031-8045-2209

“이젠 다 됐어, 바로 해 줄 것 같아”

(주)필오나 김한권 대표가 상기된 얼굴로 사무실로 들어오십니다.

수차례 겪었던 상황이지만, 몇 분 후 대표의 실망할 모습에 마음은 찌해집니다.

70대 중반의 대표가 생의 3할을 신호등 개발에 매진하여 2개의 특허를 출원한 전력절감·안정성을 제고한 신기술 신호등.

그러나 성능평가 부재로, 7년간 시장 진입을 발목 잡고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안양시와 2019년 2월부터 함께 했습니다.

여러 번 허탕 치고도 여지없이, 또, 규제부처 담당자의 대응을 곧 규제개선수용으로 믿고, 필자에게 확인을 주문하고 책상 위 전화기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늘 불쑥 찾아오셔서 나름의 빈틈없는 작전계획 수립 후에는 그간의 무용담과 불신을 쏟아내며 위로와 공감을 청하기를 2년.

올해 4월, 중첩규제까지 개선되어 이제는 신기술 신호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규제로 애로를 겪던 63개 신호등 기업도 판로를 지켜냈습니다.

그 신호등이 전 세계 도로 위 차량들을 진두지휘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조금만 빨랐다면 올해 1월 작고하시기 전에 기쁨을 같이했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대표님!

관계 부처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고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 길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 공무원을 직업으로 택한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안양시가 집중하고 있는 신산업·신기술 규제 발굴 차 기업현장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

전장 같은 산업현장에서 기업은 ‘을’중에 ‘을’이었습니다. 불합리함을 개선해달라거나 필요한 도움에 대해 선뜻 입을 떼기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을 떠나 선부른 말 한마디가 어떤 불이익으로 연결되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공무원과의 대화조차 조심스러워 합니다.

공무원 월급 주는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를 경청하고 지원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지난 6월 28일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소감을 묻는 사회자의 물음에 대한 필자의 답이었습니다.

만 2년이 넘는 경험치가 쌓였지만 규제개혁은 날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기업과 무슨 관계냐”

“지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허용해주면 다른 것도 해달라고 해서 어렵다.”

규제부처로부터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철폐를 위해 규제개혁을 권고하고, 규제 없는 놀이터 「규제샌드박스」도 생겨났지만, 규제자·피 규제자간 유기적 협의와 소통의 거리는 요원합니다.

사례집을 읽고 계신 지자체·중앙부처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손톱 밑 가시 같은 불편, 신산업·신기술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 합리화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법의 해석도, 시스템도, 트렌드를 반영하며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은 비중 있는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안양시의 규제개혁 도전과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